

2015년

경기토론회 개최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4월 21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경기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이 된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언론중재제도는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현행 법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중인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지정토론자인 오광건
경기중재위원

발제를 맡은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홍문기 교수는 “이른바 복제·전송·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원 보도에 대한 1회적 성격의 정정·반론보도만으로는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된 보도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일괄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위원은 “블로그

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기사의 삭제에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해 볼 때 법 개정 없이 현행법제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기사삭제청구권 도입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자칫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조정신청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이어서 토론회에 나선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은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뿐만 아니라 기사도 이러한 악성 댓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아, 악성 댓글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이근수
경기중재부장

한편, 사회를 맡은 이근수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부장은 “기사 삭제나 복제·전파 기사, 댓글 등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 언론사를 비롯하여 학계, 지자체,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